

의 안 번 호	1835	<p>【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】</p> <p><b>심 사 보 고 서</b></p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21. 11. 11.(목)
-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11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2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조례 중 노인복지기금 조항을 삭제하며 제명 등을 변경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노인기금 폐지로 조례 제명 변경
  - 현행: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  - 변경: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노인기금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  - 신청서 제출 및 지원 대상자 결정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정희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.12. 31.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함.
-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 중 노인복지기금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검토한 바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## 【수정안】

- 수정이유 :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.12.31. 만료됨에 따라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
-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b>(조문별 개정사항)</b> 제2조제1항 중 “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”를 “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”로, “사회복지기금”을 “자활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	제2조제1항 중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<b>(조문 대비표)</b> 제2조(기금의 설치·운용) ①~④항 생략 ⑤ <u>(현행과 같음)</u>	<b>(조문 대비표)</b> 제2조(기금의 설치·운용) ①~④항 개정안과 같음 <u>&lt;삭 제&gt;</u>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